사 설

지방의회 특정 정당 독식, 너무하다

상대 당 의원 없는 의회 말도 안돼
예산 편성부터 인사권까지… 막강 권한 남용 우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든 할 수 있다. 사실상 4대 지방선거 투표가 시작된 셈이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 투표 편의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편리함으로 인해 선거마다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여야 양당이 이번 선거에도 사활을 걸고 투표를 독려하는 이유다.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투표는 유권자의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선거여서 여야 모두 선거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있다. 도내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전북지역 지방선거에서 관심은 민주당 독식 여부다. 지난 30여 년 동안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집행부와 지방의회를 독식해온 게 현실이다. 현재의 정당별 분포만 보더라도 14곳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장 15명 가운데 기초 3명을 제외하고 민주당 일색이다.

지방의회는 더 심하다. 도의회와 전주시의회에 소수정당 비례대표의원이 포진하고 있긴 하지만 국회 원내 2당이고 현 집권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전국 어느 지역을 눈 씻고 봐도 단 한 명의 상대 당 의원 없는 의회는 없다. 단체장은 그렇다치더라도 지방의회에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상대 당 후보가 없다는 건 너무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대립형 지방자치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시군 기초단체장은 적게는 연간 4~5,000억 원에서 1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수많은 사업의 인허가와 많게는 2,0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의 승진, 전보 같은 인사권을 행사한다.

한데도 이런 막강한 권한을 민주당 소속 단체장과 의회가 서로 눈감고 짬짜미한다면 끔찍하다. 특정 정당의 지방의회 독식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전북 향토음식을 살려야

익산시, 지역 대표 음식점 알리기 나서
전주시, 향토전통음식업소 대상자 공모

익산시는 서류·현장 심사를 통해 7개소의 향토음식점을 선정하고 홍보 효과에 탁월한 현판과 배너를 제작, 식당에 배부했다. 배너에는 먹음직스러운 음식사진과 함께 향토 음식 소개, 대표메뉴가 실려 있어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향토음식점을 제대로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역의 농·축산물을 활용한 향토음식을 발굴·보전하고 계승을 위해 향토음식점 7개소, 향토음식 시범업소 4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전주시는 유네스코 지정 음식창의도시인 전주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적인 음식의 고장이자 미식 도시로 발돋움을 견인할 향토전통음식업소의 대상자를 20일까지 모집했다. 신청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음식점 중 한정식과 비빔밥, 콩나물국밥, 돌솥밥, 오모가리탕, 전주백반, 폐백음식 등 향토전통음식으로 지정된 7개 품목을 주메뉴로 취급해야 한다. 현재 전주 향토전통음식업소는 비빔밥 8곳과 콩나물국밥 7곳, 한정식 3곳, 전주백반 1곳, 돌솥밥 2곳, 오모가리탕 1곳 등 모두 22곳이다. 지정 업소에는 지정서와 표지판이 교부된다. 전주음식 홈페이지에 업소 소개와 향토전통음식업소 육성·발전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 국내외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 업소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야할 밥상이 서구의 식문화로부터 위협을 받고, 우리가 지키고 계승해야할 전통 식문화가 사라져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누군가는 우리의 전통 식문화를 보존하고 다음세대에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할 밥상들이 외식 문화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로컬 푸드의 활성화와 각 가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요리 레시피 개발, 지역 향토음식에 관한 자료 연구 등이 이뤄져야 한다. 더구나 현재의 향토음식점은 향토음식 그 자체가 아닌 음식점 위주로 지정하다 보니 다른 지역의 모범음식점과 다를 바 없다.

더 나아가 지역 어르신들과 많은 접촉을 통해 전래 음식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요리 레시피를 만들어야 한다. 전북 고유의 향토음식은 보존돼야 할 문화유산이자 동시에 다양한 관광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분야다. 전통음식 먹거리문화와 관광자원의 결합으로 전북 농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토음식의 보전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게 재해석하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전북의 창

데이터에 기반한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

전 의 준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본부장

지난 17일 새 정부의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새 정부 노동정책의 바로미터라고 하여 큰 관심을 모았지만, 아직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일까지는 여유가 있어, 바로 임금수준을 정하기보다는 향후 최저임금위원회의 진행 방향 등이 주 논의 대상이 되었다. 다음 달 9일 예정된 3차 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나 결정 단위(월 단위 혹은 시간 단위) 등의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한다.

최저임금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고 기업인들도 반대할 수 없다. 다만, 최근 5년간 41.6%의 가파른 인상으로 여러 경제적, 사회적 부작용도 분명히 존재하므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에는 이러한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여러 통계수치를 제공하는데, 이중 "최저임금 미만율"을 주목해 볼 만하다. 작년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근로자의 수는 322만 명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미만율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그 비중은 15.3%를 기록하였다.

2018년 이후 4년 연속으로 15% 이상의 미만율을 보인 것으로, 근로자 여섯 명 중 한 명은 최저임금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규정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처벌을 받는 기업인들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극소수의 이른바 악덕 기업인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의 수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일 것이다. 2018년과 최저임금이 16.4% 상승했을 때 최저임금 미만율도 사상 처음으로 15%를 넘어섰고, 2020년부터 인상률을 한 자릿수로 조절하자 미약하지만 미만율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 "새 정부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준비해야"

이런 추세에 비추어 보면, 새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에는 기업의 지불 능력을 감안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낮추어 지불능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이 기업에게 부여된다면 경악스러운 최저임금 미만율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미만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최저임금의 또 다른 이슈인 업종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도 엿볼 수 있다. 작년에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농림어업으로 미만율이 무려 54.8%에 이른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는 근로자가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뒤를 잇는 숙박 및 음식점 업도 40.2%의 미만율을 보여 최저임금을 챙기는 근로자가 세 명 중 두 명도 되지 못한다.

반면, 정보통신업이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5%도 되지 않아 대부분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존재하는 업종 간 차이를 외면하고, 차등 적용을 논의할 통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무조건적으로 논의를 거부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현실을 볼 수 있는 수치를 생산해 차등 적용을 준비해야 한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이미 최저임금 도입 첫해인 1988년 적용한 바가 있고, 최저임금법에도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만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마음먹으면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최저임금 미만율 등의 데이터들은 비정상적인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경고를 꾸준히 울려왔으나, 그간 최저임금 결정 시에는 이러한 데이터보다는 정무적, 정치적인 판단이 더 앞서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부디 공정과 상식을 제1가치로 내세우는 새 정부에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온누리

북 노동자 대학생

5월 1일은 세계적으로 '메이데이', 이른바 '노동절'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5.1절'이라고 한다. 이날은 해마다 크게 경축한다.

행사도 크게 열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는 이번 5.1절 때 TV를 통해 일하면서 공부하는, 이른바 '노동자 대학생'들을 집중 조명해 관심을 모았다. 지난 5월 1일 북한에서는 거리마다 축제 분위기가 가득했다.

화려한 공연도 펼쳐졌다. 북한은 '5·1절'을 7대 명절의 하나로 지정하고 각종 행사를 열어 기념한다. 이날만큼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고급 요리와 문화생활을 마음껏 즐긴다고 한다.

5.1절을 기념해 조선중앙TV는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낸 근로자들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행사장에는 일하면서 대학교육을 받는 '노동자 대학생'이 많이 참가했다.

어느 노동자 대학생은 "마음껏 배울 수 있는 이런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었는데 저의 노력이 따라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퇴근하면 항상 과학기술보급실로 달려오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북한에는 이처럼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노동자 대학생이 계속 늘고 있다. 평양공업대학에서는 현장 응용력을 높이기 위해 실습 강의를 듣고 있다. 의료 기구를 만드는 이 공장에선 약학 대학 교수를 초빙해서 수업을 진행한다.

이들은 "노동자 대학생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좋은 교육 체계에서 마음껏 배워서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원만히 풀 수 있게 되었고 신심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근로자들은 원격 강의 시스템을 활용한다. 북한 주요 대학에는 한국의 사이버 대학과 비슷한 원격 교육 체계가 마련돼 있다. 수강생만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학부 학부장은 "원격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목표를 선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하면서 배우는 근로자들도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로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소개했다.

북한은 2020년 4월, 원격 교육을 위한 법까지 제정하면서 근로자들의 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자 대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복규(객원 논설위원)